

# 광주 남구, 청사 비용 380억 빚 '어찌나'

청사 리모델링 과정서 발생…자산관리공사에 상환해야

감사원 “남구 업무태만으로 위탁개발비 상환예정액 늘어”



광주 남구가 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380억원대 비용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남구는 ‘청사 위탁개발비를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상환해야 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온 후 구의회 등과 상황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남구가 캠코에 상환해야 할 비용은 △청사 리모델링 비용 301억 원2000여만원 △이자 48억9000여만원 △관리비용 28억8000여만원 등 총 378억9000여만원(2018년 말 기준)에 이른다.

남구는 캠코가 상사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 28억8000만원 가운데 4년에 걸쳐 우선변제하는 안을 내놨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남은 20년의 위탁기간 동안 매월 1억5000만원 임대수익을 만들 어낸다면 비용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상가 활성화에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임대계약이 해지된 쇼핑몰 운영업체가 보증금 반환문제로 캠코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고, 일부 상인들도 손해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정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서상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은 남구에 있는 것이 명확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위탁개발비 상환예정액이 남구의 업무태만으로 301억원에서 368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남구는 위탁기관(남구)과 수탁기관(캠코)의 역할, 위탁개발비 상환 방법 등이 규정돼 있는 위탁개발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을 전적으로 남구에게 지운 감사결과를 다시 검토해 달라며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이를 각각했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두고 남구가 유리한 개발위탁계약을 맺고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광수 남구의원은 지난해 10월 규정질문에서 “(위탁개발비 상환 문제)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대신 분할상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캠코는 공문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협의를 요구한다’고 명시했고, 이 때 남구는 마땅히 위탁기간을 연장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신봉우 기자

## ‘머리채 싸움’ 곡성군의원 폭로 돈봉투 수사 ‘오리무중’

돈 받은 당직자 특정 못한 듯…의원들 “나는 안 줬다”

곡성군의회 여성 의원들간 ‘머리채 싸움’ 과정에서 폭로된 ‘돈봉투’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 적용과 입증자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곡성군의원인 A씨와 무소속 B의원은 곡성군의회에서 밀다툼 끝에 머칠과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같은 당

전남도당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을 폭로하며 논란이 일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폭력사건의 당사자인 의원 2명을 차례로 불러 언론 등에서 제기된 돈봉투의 성격과 전달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율러 이들 의원 주변인사 3~4명도 참고인으로 불려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은 두 의원들이 현금 100만 원을 2014년쯤 민주당 전남도당에

가져간 것을 확인했으나, 정작 돈을 전달받은 사람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전달한 사람을 두고도 두 의원은 서로 “자신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공직선거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됐다.

돈이 전달된 시기와 성격, 금액 규모, 돈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까지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인 지 혹은 아닌 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또 돈을 받은 사람이 당직자라고 가정하고 배임수증죄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2년인 배임증재는 적용이 어렵다. 공소시효가 남은 배임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 ● 단신 ●

“귀가 했더니 숨져 있어” 남편 살해 혐의 아내 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1·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씨(55)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숨져 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전날 저녁에 외출하고 새벽 1시쯤 귀가해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며 넘어져서 머리 등을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등 이상한 김새를 느낀 경찰이 A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 광주 상수도관 파열로 도로 위 물 범람

광주 도심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도로 위로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 위로 물이 넘쳤다. 이로 인해 인근 1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으며, 차량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중장비 등을 동원해 3시간여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목포시의회 황제 예방접종 수사 막바지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보건소 직원을 불러 독감 백신을 맞았다는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5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논란이 제기된 목포시의원들의 황제 예방접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논란이 제기된 의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조사는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목포문화연대는 황제 예방접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목포시가 입장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7일 오후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모 의원실로 출장을 가, 의원 3~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지역신문 보도가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당시 시설이 기정시설화 돼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 여수 2명 탄 1톤 화물차 해상 추락 목격자가 구조

4일 오전 11시 4분쯤 여수시 소호동 소호항 빙파제에서 1톤 화물차(포터)가 바다에 빠졌다가 탑승하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구조됐다.

신고 접수 6분여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목격자 A씨(47)가 바다에 추락한 차량 운전자 B씨(60·여)와 동승자 C씨(64·여)를 추락 현장 옆 작업용 바지선에 구조한 것을 확인했다.

B씨와 C씨는 차체온증을 호소해 119구급차를 타고 여수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를 받고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목격자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빙파제에서 마주차자 B씨 차량이 후진을 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있다. 두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